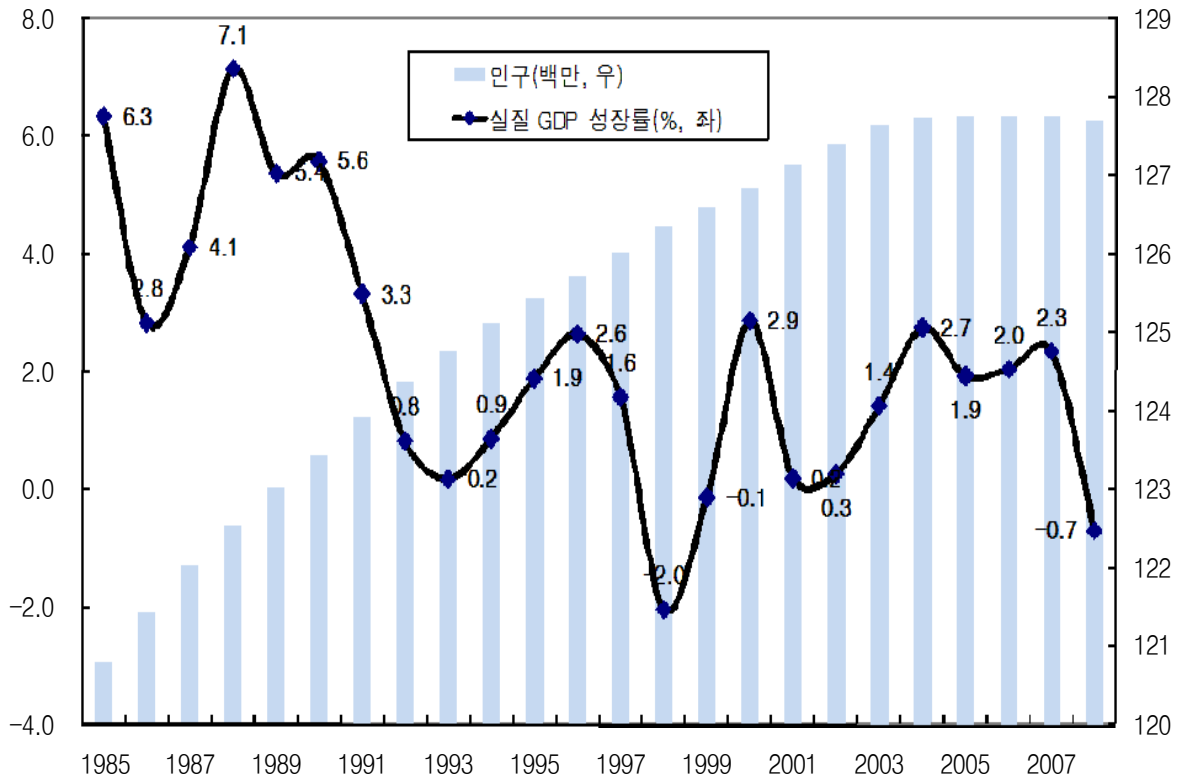


### Ⅲ. 일 본

- FY2010: 2010. 4 ~ 2011. 3
-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
  - 2009. 6.3 FY2010예산 편성의 기본적 사고 발표
  - 2009. 7.1 FY2010예산요구 지침 각의 양해
  - 2009. 9.29 신정부, FY2010예산안 편성방침 결정(7.1자 지침 폐지)
  - 2009. 10.16 각 부성 예산안 요구서 접수
  - 2009. 11.26 각 부성 예산안 요구서 및 정책평가조서 발표
  - 2009. 12.15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
  - 2009. 12.25 FY2010예산안 각의 결정
  - 2010. 1.22 FY2010예산안 변경(각의 결정) 및 국회제출
  - 2010. 1.29 FY2010예산안 국회심의 개시
- 출처:
  - 平成22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(2009.9.29)
  - 予算編成の基本方針(2009.12.15)
  - 平成22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(2009. 12.25)
  - 平成22年度予算政府案 (2009.12.25)
  - 平成22年度予算説明資料 (2009.12.25)
  - 平成22年度の鳩山總理冒頭發言 (2009.12.25)
  - 平成22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の変更(2009.1.22)
  - 平成22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1算の説明(2009.1.29)
- 환율: 100엔 = 약 1,363.13원(2009년도 평균)
- 경제규모: 2008년 경상GDP 4조 3,583억달러(우리나라 3.2배 수준)
- 수출입의 대GDP 비율(명목): 2008년 기준 34.7%(우리나라 107.0%)

□ 인구: 1억 2,769만명(2008년 기준)

□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



◇ 경제 및 재정전망

- 2010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전환 및 2009년중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등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
  - 그러나 엔고, 디플레이션, 고용 및 소득여건 악화, 기업투자 부진 등은 여전히 경제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
- 2010년 재정수지는 2009년 중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여파로 GDP 대비 -8.2% 수준을 기록할 전망

◇ 예산기조: 민주당 신정부가 총선 당시 내세운 ‘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 보호(To protect people’s daily lives)에 예산기조 아래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

- (예산편성의 3대 개혁) ‘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’ 이념 실천을 위한 예산 마련, 정치권 주도의 예산 편성체제 구축, 사업구분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화 등 예산편성의 개혁 단행
- (정책공약 이행) 일본 신정부의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양육, 고용, 환경, 과학·기술 등에 대한 3.1조엔 규모의 예산 마련
- (탄력적 경기 대응) 향후 경제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조엔 규모의 경기대책관련 예산 배정
- (중장기 전략 마련) 국민생활 보호와 연계된 경제성장과 함께 재정규율이 양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모색

◇ 예산안 내용

- FY2010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7.3조엔(13.1%) 감소한 48.0조엔 수준

- FY2010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신정부의 정책공약(manifesto) 이행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3.8조엔(4.2%) 증가한 92.3조엔 수준

◇ 주요 재정정책

- 경제위기 대응 조치

- 경제침체 완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56.8조엔 규모의 「경제위기대책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14.7조엔 규모의 FY2009 1차 추경 편성
- 고용악화 타개를 위해 긴급고용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긴급고용지원에 중점을 둔 「긴급고용대책」 발표
-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에 대응하고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24.4조엔 규모의 「긴급경제대책」을 발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7.2조엔 규모의 FY2009 2차 추경 편성

- 재정건전화

- 2010년중 중장기적 재정구조 및 재정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「재정운영전략」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

- 고용촉진·지원

- 일본정부는 ‘긴급 지원 조치’ 및 ‘긴급고용 창조 프로그램’에 중점을 둔 「긴급고용대책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FY2010 예산안에 1.2조엔 규모의 예산 투입

## 1. 경제 및 재정전망

### 가. 경제전망

- 2010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전환 및 2009년중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등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
  - 경기부양책의 효과, 수출회복, 재고조정 등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고, 고용 및 소득여건 악화, 기업투자 부진 등은 여전히 경제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
  - 한편,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급감 및 엔고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나고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더블딥(Double dip) 우려가 확산
  - 이에 따라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-2.6% 정도로 추정되며, 2010년 일본 경제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1.4%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, 3년 만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
  
- 일본정부는 경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FY2009년중 세 차례에 걸친 81.2조엔(재정지출 22.6조엔)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추진중
  - 일본정부는 2009년 주로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해소, 미래 성장동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4월 「경제위기대책」, 10월 「긴급고용대책」, 12월 「긴급경제대책」의 경기대응책을 마련
  - 이러한 경기부양책 추진을 위해 1~2차 추경예산 편성 및 2010년 세제개정을 추진하고 FY2010 예산안에 경제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조엔 규모의 경기대책 예비비 등을 편성

<표 III-1>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

(단위: 전년 대비 %, 조엔)

구 분	2008	2009	2010
	실적	추정	전망
국내총생산(실질)	- 3.7	- 2.6	1.4
민간최종소비지출	- 1.8	0.6	1.0
민간주택투자	- 3.7	- 16.9	4.4
민간설비투자	- 6.8	- 16.5	3.1
재화·서비스 수출	- 10.4	- 14.4	8.3
재화·서비스 수입	- 4.4	- 11.1	5.2
내수기여도	- 2.6	- 2.2	1.1
민간	- 2.3	- 3.2	1.3
공공	- 0.3	1.0	- 0.2
외수기여도	- 1.1	- 0.5	0.4
노동 및 고용			
취업자 수	- 0.3	- 0.5	0.2
고용자 수	- 0.6	- 1.8	0.3
실업률	- 0.1	- 1.3	0.3
생산			
광공업생산지수	- 12.7	- 11.2	8.0
물가			
생산자물가지수	3.2	- 5.4	- 0.9
소비자물가지수	1.1	- 1.6	- 0.8
GDP 디플레이터	- 0.5	- 1.7	- 1.0
국제수지			
수출	- 16.3	- 23.3	6.6
수입	- 3.9	- 28.5	6.0
경상수지(조엔)	12.3	14.0	15.8

자료: 내각부, 「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」, 2009.12.25.

## 나. 재정전망

□ 2010년 재정여건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의 여파로 더욱 악화될 전망

-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의 여파로 GDP 대비 8.2%를 기록할 전망
- 국가채무는 신정부의 예산 효율화 노력, 신규 국채발행 억제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44.3조엔 규모(GDP 대비 134.0%)에 달할 전망
  - 2009년의 경우 하반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신규 국채발행이 급증하여 53.5조엔(GDP 대비 126.9%)으로 추정되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

<표 III-2> 주요 재정지표 추이

(단위: GDP 대비 %, 조엔)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
	실적			추정	전망
총수입	34.5	33.5	34.4	34.2	32.9
총지출	36.2	36.0	37.1	41.6	41.1
재정수지	- 1.6	- 2.5	- 2.7	- 7.4	- 8.2
구조적 재정수지	- 2.1	- 3.5	- 3.5	- 6.3	- 7.2
신규 국채발행액(조엔)	27.5	25.4	33.2	53.5	44.3
국채 의존도 <sup>1)</sup>	33.7	31.0	39.2	52.1	48.0
국채잔고	104.1	105.0	114.0	126.9	134.0

주: 1) 국채의존도 = 국채발행액/총재정지출

자료: OECD, Economic Outlook(86호), 2009.12.

재무성, 「平成22年度予算政府案」, 2009.12.25

## 2. 예산기조

민주당 신정부가 총선 당시 내세운 ‘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 보호(To protect people’s daily lives)에 중점을 두어 ① 예산편성의 3대 개혁 ② 정책공약 이행 ③ 탄력적 경기 대응 ④ 중장기 전략 마련 등 세부적 재정기조를 제시

- (예산편성의 3대 개혁) ‘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’ 이념 실천을 위한 예산 마련, 정치권 주도의 예산 편성체제 구축, 사업구분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화 등 예산편성의 개혁 단행
  - ‘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’ 이념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
  -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실 주도로 예산의 기본방침, 정책공약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각료위원회나 3당 협의 또는 관계장관 등에 의한 절충 등을 거치는 정치 주도의 예산 편성 실시<sup>5)</sup>
    - 세제개정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와 당으로 이원화되었던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정치가만으로 구성된 세제조사회를 신설하여 세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부여
  - 행정쇄신회의의 ‘사업구분(事業仕分け)’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사업의 중복성 및 존치여부 등 검토의 전체 과정을 국민 공개로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증진
  
- (정책공약 이행) FY2010 예산안은 일본 신정부의 정책공약(「3당 정권연립 합의서」 포함)이행을 위해 자녀양육, 고용, 환경, 과학·기술 등에 중점을 둔 총 3.1조엔 규모의 예산 마련

5) 기존에는 재무성 주도로 원안을 작성하고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왔음

- 정책공약상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 소요액은 2013년까지 총 16.8조엔 규모인데 이 중 FY2010 일반회계 집행규모는 3.1조엔(아동수당 지급 1.7조엔, 농가소득 보상 0.6조엔, 고교 수업료 무상화 0.4조엔 등) 수준
  - 동 재원은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 및 해당 사항 반영 결과에 따라 확보된 3.3조엔(공익법인 기금 반납 1조엔, 예산요구단계에서 세출 삭감 및 절감 2.3조엔)으로 충당할 계획
- (탄력적 경기 대응) 엔고 지속 및 디플레이션 등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 우려에 따라 경기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경제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2조엔 규모(일반회계 세출총액의 2.2%)의 경기대책관련 예산 배정
- FY2010 예산안에 경제위기대응·지역활성화 예비비 1조엔 신설, 비특정 의결 국고 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엔을 편성
- (중장기 전략 마련) 국민생활 보호와 연계된 경제성장과 함께 재정규율이 양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모색
- FY2010 예산안을 시작으로 2010년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인 국민생활 보호 관점에서 고용, 환경, 자녀양육, 과학·기술 등에 중점을 둔 중장기 신경제성장 전략 마련 예정
  - 이와 함께 재정규율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 안정을 고려한 중기재정의 기본구조를 책정하고 중장기적 재정규율 실정을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재정건전화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

### 3. 예산안 내용

□ FY2010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.2% 증가한 92.3조엔으로 예산안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

<표 III-3> FY2010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

(단위: 십억엔, %)

구 분	FY2009	FY2010	비교증감액	증감률
	추정(A)	전망(B)	(B-A)	(%)
<b>세 입</b>				
조세 및 인지수입	46,103.0	37,396.0	- 8,707.0	- 18.9
기타 수입	9,151.0	10,600.2	1,449.2	15.8
국채발행	33,294.0	44,303.0	11,009.0	33.1
<b>계</b>	<b>88,548.0</b>	<b>92,299.2</b>	<b>3,751.2</b>	<b>4.2</b>
<b>세 출</b>				
국채비	20,243.7	20,649.1	405.3	2.0
지방교부세교부금 등	16,573.3	17,477.7	904.4	5.5
일반세출	51,731.0	53,454.2	1,723.3	3.3
FY2007결산 적자보전	-	718.2	718.2	-
<b>계</b>	<b>88,548</b>	<b>92,299</b>	<b>3,751.2</b>	<b>4.2</b>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2年度予算政府案」, 2009.12.25

#### 가. 세입내역

□ FY2010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7.3조엔(13.1%) 감소한 48.0조엔 수준

○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안 대비 법인세 4.6조엔(43.5%) 감소 및 소득세 3.0조엔(19.0%)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.7조엔(18.9%) 감소한 37.4조엔 수준으로 전망

<표 III-4> FY2010 조세 및 인지수입

(단위: 십억엔, %)

세 목 (일반회계)	FY2009		FY2010	전년 대비			
	예산(당초)	추경	예산안	예산(당초)		추경	
	(A)	(B)	(C)	(C-A)	증감률	(C-B)	증감률
원천소득세	12,661	10,223	10,154	-2,507	-19.8	-69	-0.7
신고소득세	2,911	2,541	2,460	-451	-15.5	-81	-3.2
(소득세 계)	(15,572)	(12,764)	(12,614)	-2,958	-19.0	-150	-1.2
법인세	10,544	5,175	5,953	-4,591	-43.5	778	15.0
상속세	1,522	1,280	1,271	-251	-16.5	-9	-0.7
소비세	10,130	9,381	9,638	-492	-4.9	257	2.7
주 세	1,420	1,420	1,383	-37	-2.6	-37	-2.6
담배세	8,430	817	827	-16	-90.2	10	1.2
회발유세	2,628	2,663	2,576	-52	-2.0	-87	-3.3
석유가스세	12	13	12	-1	-	-1	-7.7
항공기연료세	83	83	77	-6	-7.2	-6	-7.2
석유석탄세	510	480	480	-30	-5.9	-	-
전원개발촉진세	351	330	330	-21	-6.0	-	-
자동차중량세	646	631	447	-199	-30.8	-184	-29.2
관 세	846	744	756	-90	-10.6	12	1.6
톤 세	10	10	8	-2	-20.0	-2	-20.0
인지수입	985	1,070	1,024	39	4.0	-46	-4.3
<b>합계</b>	<b>46,103</b>	<b>36,861</b>	<b>37,396</b>	<b>8,707</b>	<b>-18.9</b>	<b>535</b>	<b>1.5</b>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算の説明」, 2009. 1.29

- 반면 기타 수입은 외환자금 특별회계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잉여금 7.7조엔 등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전년 대비 1.4조엔(15.8%) 증가한 10.6조엔 규모로 추정
-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33.1% 증가한 44.3조엔 규모에 이를 전망
  - 국채발행액이 조세수입을 초과한 경우는 FY1946 이래로 처음이며 FY2010 국가채무 수준은 약 637조엔(GDP 대비 134%)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

## 나. 세출내역

- FY2010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신정부의 정책공약(manifesto) 이행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3.8조엔(4.2%) 증가한 92.3조엔 수준
  - 일반세출 규모는 사회보장관련비 증가, 경제위기대응 및 지역활성화 예비비(1조엔)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1.7조엔(3.3%) 증가한 53.5조엔 수준
  - 신정부 정책공약 이행에 따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등으로 사회보장관련비는 전년 대비 2.4조엔(9.8%) 증가한 반면 공공사업관련비는 전년 대비 1.3조엔(18.3%) 감소

<표 III-5> FY2010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

(단위: 십억엔, %)

구 분	FY2009	FY2010	비교증감액	증감률
	당초(A)	전망(B)	(B-A)	(%)
사회보장관계비	24,834.4	27,268.6	2,434.2	9.8
문교 및 과학진흥비	5,310.4	5,586.0	275.6	5.2
연금관계비	787.2	714.4	-72.9	-9.3
방위관계비	4,774.1	4,790.3	162	0.3
공공사업관계비	7,070.1	5,773.1	-1,297.0	-18.3
경제협력비	629.5	582.2	-474	-7.5
중소기업대책비	189.0	191.1	21	1.1
에너지대책비	856.2	842.0	-142	-1.7
식료안정공급관계비	865.9	1,159.9	294.0	33.9
기타 경비	5,064.2	5,196.8	132.7	2.6
경제긴급대응·지역활성화 예비비	-	1,000.0	1,000.0	-
경제긴급대응 예비비	1,000.0	-	-1,000.0	-
예비비	350.0	350.0	0	0.0
<b>합계</b>	<b>51,731.0</b>	<b>53,454.2</b>	<b>1,723.3</b>	<b>3.3</b>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2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の変更」, 2009.1.22

□ (정책공약 주요 내용) 일본 신정부는 ‘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’라는 이념 실현을 위해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양육, 고용, 환경, 과학·기술 등에 중점을 두어 3.1조엔 규모의 예산 편성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

○ (교육지원) 자녀수당 지급 및 고교 무상화: 2.1조엔

- 자녀수당 지급(1.7조엔): 자녀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13,000엔(FY2011에는 26,000엔)씩 지급하고, 소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등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

- 고교교육의 무상화(0.4조엔): 공립고등학생은 수업료(연간 약 12만엔)를 면제해 주고, 사립고교생을 둔 가구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(저소득 가구의 경우 더 많은 약 18만~24만엔 지급)
- (고용대책) 고용보험제도 기능 강화 및 고용조정 조성금 확충: 0.02조엔
  -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: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'6개월 이상 고용'에서 '31일 이상 고용'으로 완화
    - FY2009 제2차 추경예산상 실업급여관련 3,500억엔 증액
  - 고용조정 조성금 확충: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피고용자의 임금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조정 조성금 지급요건 완화
    - 이에 따른 예산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액(약 7,500억엔)
- (의료·간호) 진료보수 개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
  - 진료보수 개정에 중점: 10년 만에 진료보수의 후자를 추구하고 특히 응급, 산부인과, 소아과, 외과에 중점을 두고 지원
  -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응급 입원 의료서비스에 4,000억엔 정도 의료비 증액
  - 간호 노동자의 처우 개선: 근무지 내에 보육시설 정비를 촉진하고,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
  -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율 인상 및 간염 치료를 위한 지원 확대
- (환경·과학기술) 친환경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
  - 연료전지, 전기자동차 개발, 전기충전설비 설치 등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
  - Green Innovation 등 신성장 전략상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중점 지원
- (농가 지원) 호별소득보상모델 사업 및 수전활용자급력향상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보조: 0.6조엔
  - 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: '생산수량목표'에 따라 생산을 한 농가에 대해 정액부분(10a당 1.5만엔: 과거 수년간의 표준 생산비용과 표준 판매가격 차이의 평균)과 변동부분(당해 생산 판매가격이 표준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)에 대한 보조금 지급

- 수전활용자급력향상사업: 논에서 보리, 콩, 분말 또는 사료용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교부금을 지급해 주식용 쌀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득 수준이 비슷하도록 보장해줌으로써 식량의 자급력을 확보
- (고속도로 무료화) 고속도로 이용 무료화의 단계적 실시: 0.1조엔
  -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한된 노선에서 시범 실시한 후,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타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도 병행
- (잠정세율) 잠정세율 폐지와 조세부담 경감: 0.2조엔
  - 원유가격의 안정화, 재정 사정, 여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잠정세율을 폐지하고 현 세율 수준은 유지하도록 함
  - 자동차중량세도 향후 10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하고 잠정세율 부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국고 세수의 1/2을 경감하도록 함
- (연금 기록문제 대응) 연금 수급관련 자료 정리: 0.1조엔
  - 연금 수급자 명부나, 수급액 등의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연금 누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전자문서화하고 피보험자의 수급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
- (경기대책) 엔고 및 디플레이션에 따른 더블딥(Double dip) 우려에 따른 탄력적 경기 대응을 위해 2조엔 규모의 예산 확보

<표 III-6> 신정부 주요 정책공약 및 재원확보 방안

(단위: 조엔)

민주당의 주요 정책공약		재원확보 방안	
- 자녀수당	1.7	- 행정쇄신위원회의 사업구분 결과 반영 (공익법인등 기금 반납)	2.0 (1.0)
- 고교무상화	0.4		
- 고용대책	0.02	(예산요구단계에서의 세출삭감)	(1.0)
- 농가지원	0.6	- 예산요구단계 감액	1.3
- 고속도로무료화	0.1		
- 잠정세율	0.2		
- 연금기록문제 대응	0.1		
합계	3.1	합계	3.3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2年度予算説明資料」, 2009.12.25.

## 4. 주요 재정정책

### 가. 경제위기 대응 조치

- 사상 최대 규모의 「경제위기대책」 발표 (2009.4.10)
  - 단기적인 경제위기 심화 및 세계경제 재조정 국면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책으로서, 즉 경기침체 완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, 56.8조엔(재정지출 15.4조엔) 규모의 동 대책 발표
  - 기존 경기부양책에 비해 고용 및 금융안정, 미래성장전략, 세제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분야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둠
  
- 「경제위기대책」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14.7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(2009.4.27)
  - 추경재원은 10.8조엔의 신규 국채발행,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적립금 3.1조엔, 경제대응예비비 0.85조엔으로 구성
  - 추경 내용은 주로 경제위기대응관련 비용이며 이 중 금융대책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, 지방공공단체 지원 등의 금액이 각각 3.0조엔, 2.6조엔, 2.4조엔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54.4%를 차지
  - 「경제위기대책」을 위해 필요한 총재정규모는 15.4조엔이나 고용지원금 0.6조엔(노동보험 특별회계에서 충당) 및 증여세 감세가 0.1조엔 계획되어 최종 추경예산은 14.7조엔으로 편성

<표 III-7> FY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

(단위: 십억엔)

세 출	금액	세 입	금액
경제위기대응관련	14,698.7	세외수입	3,106.6
- 고용대책	1,269.8	- 재정투융자특별회계	3,100.0
- 금융대책	2,965.9	- 기타	6.6
- 저탄소혁명	1,577.5	국채금	10,819.0
- 건강·육아 등	2,022.1	- 건설국채	7,332.0
- 미래성장동력 확충	2,577.5	- 특례국채	3,487.0
- 지역활성화 등	198.1		
- 안전·안심확보 등	1,708.9		
- 지방공공단체	2,379.0		
국채조정기금특별회계	76.8		
경제대응예비비 감액	△ 850.0		
계	13,925.6		13,925.6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補正予算等の説明」, 2009.4.27.

□ 고용악화 타개를 위한 「긴급고용대책」 발표 (2009.10.23)

-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고용안정 및 향후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내각부 산하 긴급고용대책본부에서 동 대책을 발표
-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, 빈곤층 및 신규 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, 고용창출의 본격화 등의 3대 분야에 중점
- 기대효과: 빈곤층 고용 최우선 지원, 미래성장분야에의 고용창출 등을 통해 연말까지 10만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

□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에 대응하고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「긴급경제대책」 발표 (2009.12.8)

- 고용악화, 디플레이션 압력 및 엔고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하고자, 총 24.4조 엔(재정지출 7.2조엔) 규모의 동 대책을 발표
  - 고용촉진, 지구 온난화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환경대책,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경기대책,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지원 등에 중점
- 2009년 12월 8일에 발표된 「긴급경제대책」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기본경비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7.2조엔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발표 (2009.12.15)
- 「긴급경제대책」에 따라 고용안정(0.6조엔), 환경대책(0.8조엔), 경기대책(1.6조엔), 생활안정(0.8조엔), 지방지원(3.5조엔)에 중점
  - 추경 재원은 1차 추경 집행 동결분 2.7조엔,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분 1.2조엔, 국채발행 3.0조엔 등을 활용
  - 한편, FY2009 세수는 당초 예산(46.1조엔)에 비해 9.2조엔 감소한 36.9조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족한 세수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충당

<표 III-8> FY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내역

(단위: 십억엔)

세 출	금액	세 입	금액
「긴급경제대책」 관련	7,201.3	조세 및 인지수입	-9,242.0
- 고용대책	614.0		
- 환경대책	776.8		
- 경기대책	1,574.2		
- 생활안정	784.9		
- 지방지원	3,451.5		
기타경비	227.4	세외수입	-15.4
기본경비 감액	-7,344.1	국채금	
- 1차추경 집행동결	-2,696.9	- 건설국채	9,342.0
- 지방교부금 <sup>1)</sup>	-2,951.5	- 특례국채	100.0
- 경제위기대응예비비	-150.0		
- 예비비	-100.0		
- 기타 기본경비 불용액	-1,445.7		
계	84.6		84.6

주: 1)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액  
 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補正予算(第2号)」, 2009.12.15.

## 나. 재정건전화

□ 일본 신정부는 2009년 12월 15일 ‘사람 중심의 경제’를 목표로 국민생활 보호 및 신성장전략 마련, 예산편성 과정의 개혁에 중점을 둔 「예산편성의 기본방침」에서 향후 재정건전화 방향을 언급

○ FY2010 및 향후 예산안 수립시 행정쇄신회의의 「사업구분(事業仕分け)」 결과 반영에 따른 세출 삭감, 세수감소에 따른 신규 국채발행 억제, 중장기적 예산의 효율화, 재정건전화의 기본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과정 개혁 추진

- FY2010 예산안 편성시 재정규율을 지키기 위한 목표로 국제발행액을 44조엔 이내로 설정
- 2010년중 중장기적 재정구조 및 재정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「재정운영전략」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

#### 다. 고용촉진 · 지원

-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향후 경기가 회복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“고용 없는 회복(Jobless recovery)”이 우려되고 있음
  - 일본 실업률은 2009년 3/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5.4%(2009년 7월 사상 최고치인 5.7%)를 기록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, 고용사정 악화를 반영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
  -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“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안심,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” 실현을 위해 먼저 고용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 다음 세 가지 기본 방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
    - 경제정세 변화에 탄력적 대응: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시의 적절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
    - 빈곤·곤궁자, 신규 졸업자 지원을 최우선: 저소득층, 신규 졸업자, 여성, 중소기업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
    - 고용창출 분야에 중점적 지원: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유도 위해 미래 성장분야인 간호, 농업, 지역사회(NPO, 사회적 기업 등) 분야에 고용·산업·교육정책 등을 병행하여 다각적으로 지원

<표 III-9> 일본의 고용동향

(단위: 전년동기 대비, 만명, %)

구 분	2007	2008				2009			
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
취업자수(증감)	23	6	-25	-41	-48	-49	-132	-114	-119
비경제활동인구(증감)	12	18	19	32	41	9	58	22	51
실업률	3.9	4.0	4.0	4.0	3.9	4.6	5.2	5.4	5.0
고용률	58.1	57.2	58.4	57.9	57.6	56.7	57.2	56.9	56.6

자료: 총무성, 「勞働力調査(基本集計)」, 2010.1.29.

- 2009년 10월 16일 일본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내각부 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‘긴급고용대책본부’를 설치
  - 2009년 10월 23일 긴급고용대책본부에서는 ‘긴급 지원 조치’와 ‘긴급고용 창조 프로그램’에 중점을 둔 ‘긴급고용대책’을 발표
    - 긴급 지원 조치: 빈곤·곤궁 상태에 있는 이직자, 비정규직 노동자, 여성, 신규 졸업자를 경제·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,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유지 보조
    - 긴급고용 창조 프로그램: 간호 분야, 그린(농업, 환경·에너지, 관광) 분야, 지역사회(사회적 기업) 분야를 고용 창조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
    - 동 대책은 FY2010 예산안의 사회보장관계비에 대부분 반영됨
  
- FY2010 예산안상 고용대책관련 예산은 ‘긴급고용대책’ 중 ‘긴급 지원 조치’와 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  - 고용대책관련 예산은 ‘긴급고용대책’상 긴급지원조치에 따라 고용유지대책 0.7조엔(1,182.6%), 고용보험국가부담 0.1조엔(87.9%) 급증 등으로 전년 대비 0.8조엔

(215%) 증가한 1.2조엔 수준

<표 III-10> FY2010 고용대책관련 예산

(단위: 십억엔, %)

구 분	FY2009	FY2010	증감액	증가율
고용보험국고부담	160.2	301.0	140.8	87.9
고용유지대책	58.1	745.2	687.1	1,182.6
빈곤·곤궁자 지원	1.4	3.4	2.0	142.9
신규 졸업자 지원(신설)	-	0.4	0.4	-
여성취업 지원	2.1	2.2	0.1	4.8
독립행정법인 관련 지출	143.9	116.6	- 27.3	- 19.0
합 계	371.1	1,168.8	797.7	215.0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2年度社會保障關係予算」, 2009.12.25.

- 고용보험국고부담: 3,010억엔
  -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(129억엔): ‘6개월 이상 고용 예상’에서 ‘31일 이상 고용예상’으로 완화
  - FY2009 2차 추경예산상 실업급여관련 예산을 3,500억엔 증액
- 고용유지대책: 7,452억엔
  - 고용조정조성금: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‘고용유지지원금’과 유사
  - 고용조정조성금의 공급요건을 완화: 기존에는 생산량, 매출고 등이 전년에 비해 5%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완화 이후 2년전 대비 10% 이상 감소한 적자기업의 경우도 포함
  - 연간 고용조정조성금 지급한도일(200일) 폐지
- 빈곤·곤궁자 지원: 34억엔

-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·생활지원 제도의 정비를 위해 「비정규 노동자 종합 센터」의 설치 확대(19개소 → 32개소)
  - 신규 졸업자 지원 신설: 4억엔
    - 미취업 졸업자의 인턴십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
  - 여성 취업 지원: 22억엔
    - 유자녀 여성 취업 지원 사업소 증설(148개소→163개소)
  - 독립행정법인 관련 지출 삭감:
    - 행정쇄신위원회의 사업구분 결과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관련 지출(고용·능력개발 기구 운영비 교부금 등, 고령·장애자 고용지원 기구 운영비 교부금 등)은 삭감
- 2009년 12월 30일 일본정부는 ‘신성장전략’ 발표시 환경, 에너지, IT기술, 관광, 농림수산업 등을 신성장 분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